

CFE REPORT

CFE Report

2017. 9. 15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 한국 기업공통의 “위협요인”을 중심으로

이 웅 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요 약>

세계은행은 2017년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순위에 한국을 190개국 중 5위에 꼽았다. 그러나 세계경제포럼(WEF), IMD등은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각각 26, 29에 랭크했다 (국가경쟁력 평가 시 기업환경도 고려됨). 아마도 정부의 규제와 노동시장까지 고려한 WEF와 IMD의 순위가 더 정확할 것이다.

그러나 경영자가 인지하는 기업환경은 이들 연구기관이 발표하는 지수와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위 외국 보고서들은 주로 기업환경을 정책/제도환경 차원에서 파악하였다. 본 보고서는 기업환경을 정책/제도환경 뿐만 아니라, 국제적환경, 거시경제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시장/산업환경의 5가지 분야로 구분한 후, 각 부분별로 최근 한국 경영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요인들을 점검하였다. 그러나 한국 산업의 모든 섹터를 언급하기는 불가능하기에, 방대한 경영환경 중 한국기업이 공통으로 인지하는 위협요인의 체크에 초점을 두어, 일반적인 정책 시사점을 주고자 하였다.

예상했던 대로 한국의 정책 및 제도환경은 최근 극도로 기업하기 어려운 쪽으로 변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인상 및 통상임금 판결, 근로시간 단축, 탈원전 등으로 인해 기업의 비용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공정위의 권한이 늘어나면서 가격통제에 대한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기업들은 공식적 규제와 제도 이외에도 국제적으로 커다란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의 북핵위기와, 사드보복으로 인한 중국리스크는 안보의 위기가 경영의 위기로 직결됨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안보가 곧 경제이다’라는 말을 경영자들에게 실감케 하고 있다. 오히려 거시경제적 환경은 유가, 환율 등의 요소가 위기와 기회요인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어 다른 요인에 비해 위협이 덜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본 보고서는 다른 보고서에서 강조되지 않았던 사회문화적 요인을 최근의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보았다. 특히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가

사그러지지 않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의 유행과 맞물려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기업에 대한 반감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시장/산업적 위협요인으로는 1) 경쟁의 심화, 2) 인구절벽, 3) 강성노조를 꼽았다.

결론적으로 평균적인 한국의 경영자들은 정책/제도적 위협요인 말고도 국제적 환경의 위협, 사회문화적 환경의 위협, 그리고 시장/산업환경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정부는 새로운 규제와 가격(임금포함)에 대한 간섭을 줄이고 그 열정과 자원을 기업의 다른 위협을 최소화 시키는데 써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핵에 현명하게 대처하고 동맹과 사드배치를 협의하는 데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곧 경제인들의 불안을 줄여주는 것임에 인식을 같이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 특히 젊은 층이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지 않도록 국가차원에서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 인적자원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인구절벽과 강성노조에 대한 대처도 결국 정부의 현명한 판단과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

I

서론

- 최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국의 기업경영 환경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실정
 - ▶ 특히 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사법부의 친노조 성향의 판결은 기업 활동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

- 그러나 “기업환경”이란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부규제와 제도” 환경 이외에도 여러 다양한 요소의 고려가 필요
 - ▶ 예를 들어 한국의 경영자는 중국의 사드보복성 경제제재, 미국의 FTA 재협상, 소비트렌드의 변화, 4차산업환경의 도래 등의 다양한 경영환경 변화에 대처해야 함

- 본 보고서의 목적은 한국 기업이 현재 처한 기업환경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한국 경영자들의 경영부담이 최근 어떻게 총체적으로 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보다 우호적인 기업활동을 위한 정책제언을 하는 것
 - ▶ 특히 다양한 경영환경 중에서 한국 경영자들에게 가장 “공통적으로 위협적인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파악
 - ▶ 이를 위해 과거 해외 연구기관들이 파악한 한국의 경영환경 분석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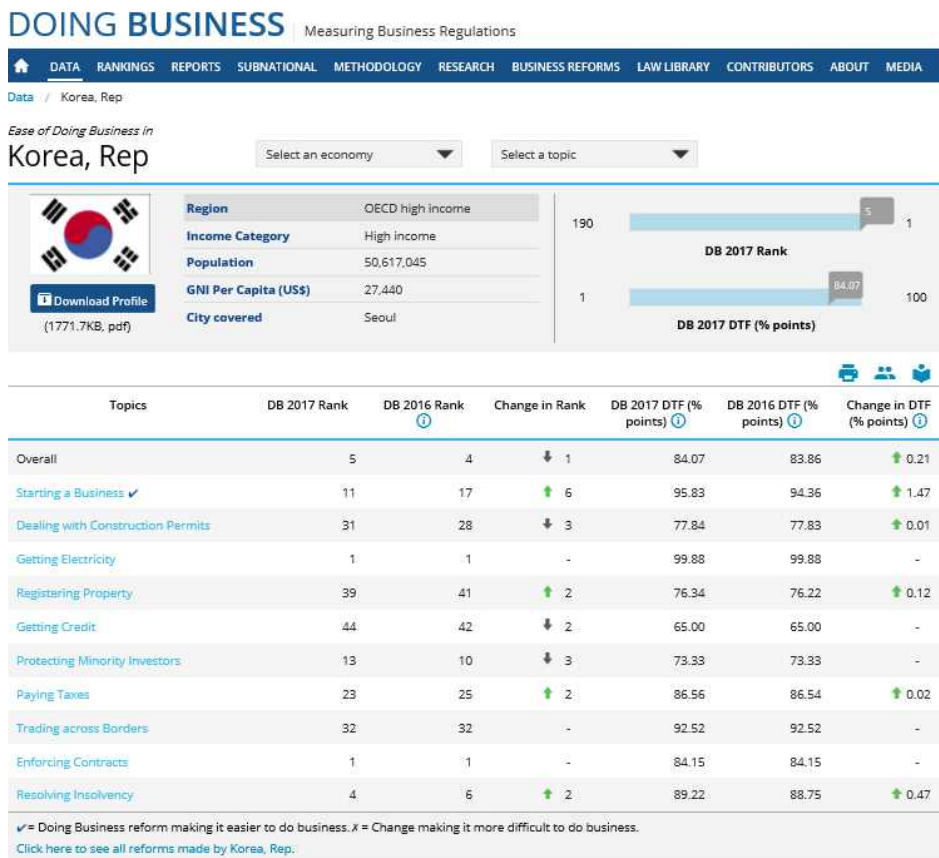
- 기존 연구들을 참조하여, 본 보고서는 경영환경을 크게 1) 정책/제도환경, 2) 국제적환경, 3) 거시경제환경, 4) 사회문화적 환경, 5) 시장/산업환경의 5가지 분야로 구분

- 해외연구들은 주로 정책 및 제도환경 분석에 초점을 맞춘 반면, 본 보고서에서는 정책/제도적 위협요인 뿐만 아니라 국제적요인, 사회문화적요인과 시장/산업요인들까지 고려해야 한국기업 경영자들의 고충을 헤아릴 수 있다고 판단
 - ▶ 정부는 보다 포괄적인 경영위험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

II 해외 기관들이 평가한 한국의 기업환경

- 세계은행(World Bank)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Doing Business) 평가에서 한국은 2017년 총 190개 국가 중 5위에 꼽힘 (아래 <표 1> 참조)
 - ▶ 이는 2016년의 4위에서 한 단계 하락한 결과이지만 여전히 매우 높은 순위
 - ▶ 2017년 1위는 뉴질랜드, 2위는 싱가포르, 3위는 덴마크, 4위는 홍콩
 - ▶ 그러나 미국은 8위, 일본은 34위, 이스라엘은 52위, 중국은 78위에 랭크되어 창업조건이 양호하고 벤처열기가 뜨거운 나라들의 순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평가의 타당성에 의문이 감

<표 1> 세계은행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Ease of Doing Business) 평가¹⁾



- 위 세계은행 순위에는 업종별 규제나 노동시장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어

1) <http://www.doingbusiness.org/data/exploreeconomies/korea>

서 정확한 한국 기업환경의 실정을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²⁾

▶ 세계은행의 평가항목은 <표 1>과 같이 “창업, 허가취득, 인력고용, 재산등록, 세금납부, 국제무역, 계약이행, 자금조달 및 폐업”의 10개 요인으로 구성됨

▶ 이는 회사 존립 기초요소 중 10가지를 평가한 것으로 아주 기본적인 인프라의 존재만을 체크한 것이며, 따라서 종합적인 경영환경 평가로 보기엔 매우 미흡

▶ 또한 현장경영자들이 중시하는 기업 “위협요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반면 세계경제포럼(WEF)이 산정한 2016~17년 국가경쟁력순위에서는 분석대상 138개 국 중 한국은 26위에 불과하며,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이 발표한 2017년 국가경쟁력 순위에서도 전체 63개국 중 29위를 차지 (<표 2>)

▶ 이것은 한국이 5위라는 세계은행의 조사결과와는 크게 동떨어진 것

2) “기업하기 좋은 나라 4위’ 한국, 국가경쟁력은 왜 26위 머물까” (동아일보 2015. 10. 28.)
<http://news.donga.com/3/all/20151027/7444478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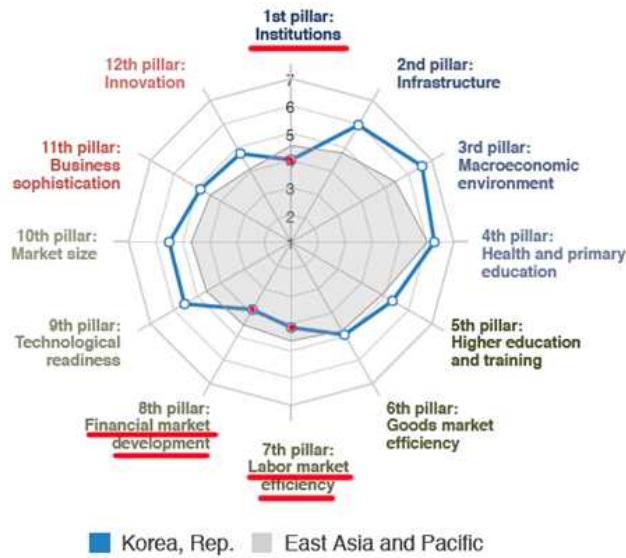
<표 2> 2017년 세계경제포럼(WEF)과 IMD의 국가경쟁력 순위³⁾

WEF순위				IMD순위		
Economy	Score ¹	Prev. ²	Trend ³	COUNTRIES	2017 RANK	2017 VALUE
1	Switzerland	5.81	1	Hong Kong	1	100.00
2	Singapore	5.72	2	Switzerland	2	99.66
3	United States	5.70	3	Singapore	3	99.49
4	Netherlands	5.57	5	USA	4	98.66
5	Germany	5.57	4	Netherlands	5	96.55
6	Sweden	5.53	9	Ireland	6	95.79
7	United Kingdom	5.49	10	Denmark	7	95.56
8	Japan	5.48	6	Luxembourg	8	95.06
9	Hong Kong SAR	5.48	7	Sweden	9	94.96
10	Finland	5.44	8	UAE	10	94.08
11	Norway	5.44	11	Norway	11	93.07
12	Denmark	5.35	12	Canada	12	92.25
13	New Zealand	5.31	16	Germany	13	91.59
14	Taiwan, China	5.28	15	Taiwan	14	90.48
15	Canada	5.27	13	Finland	15	88.89
16	United Arab Emirates	5.26	17	New Zealand	16	88.67
17	Belgium	5.25	19	Qatar	17	88.10
18	Qatar	5.23	14	China Mainland	18	87.76
19	Austria	5.22	23	United Kingdom	19	86.78
20	Luxembourg	5.20	20	Iceland	20	86.40
21	France	5.20	22	Australia	21	85.25
22	Australia	5.19	21	Israel	22	85.10
23	Ireland	5.18	24	Belgium	23	83.91
24	Israel	5.18	27	Malaysia	24	83.53
25	Malaysia	5.16	18	Austria	25	83.33
26	Korea, Rep.	5.03	26	Japan	26	82.27
27	Iceland	4.96	29	Thailand	27	80.10
28	China	4.95	28	Czech Republic	28	78.96
				Korea	29	78.65
				Estonia	30	77.76
				France	31	77.68

- 세계은행 평가와 달리, WEF/IMD 국가경쟁력 평가는 한국의 기업환경을 더 구체적으로 평가
 - ▶ 예를 들어 WEF는 기초 인프라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요인, 기술요인, 시장요인, 혁신요인 등 총 12개 환경항목에 걸쳐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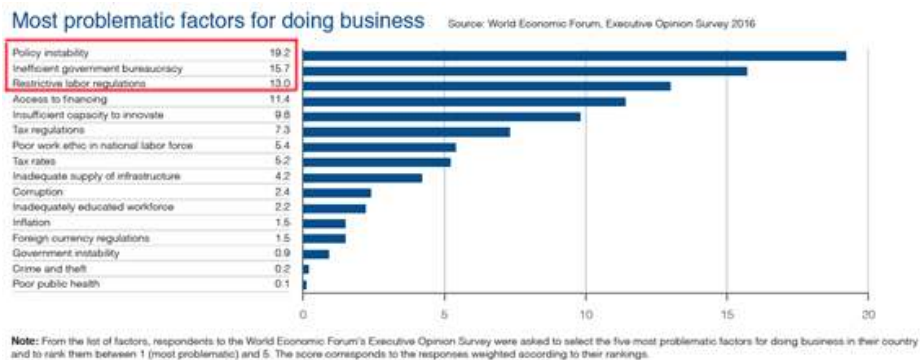
3)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6–2017” & “The 2017 IMD World Competitiveness Ranking”

<그림 1> 세계경제포럼(WEF)의 한국경쟁력 세부 분석내용⁴⁾



- 세계경제포럼(WEF)이 한국의 경쟁력을 세부적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가장 취약한 기업환경은 1) 제도(Institution), 2) 노동시장 효율성, 3) 금융시장 (<그림1>)
- 또한 WEF는 한국 내 기업활동에서 가장 장애가 되는 요인 (즉, “위협요인”)에 대해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

<그림 2> 세계경제포럼(WEF)의 한국내 기업활동 장애요인 설문결과



- 위 WEF 설문결과, 한국 기업환경의 가장 큰 장애요인들은 1) 정부정책의 불안정성(Policy Instability), 2) 비효율적인 정부의 관료주의 (Inefficient Government Bureaucracy), 3) 경직된 노동법규(Restrictive Labor Regulation)

4)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6-2017”

- 결론적으로 외국의 보고서들은 한국의 정부정책/규제요인과 노동시장의 요인을 가장 불안한 환경요인이라고 꼽고 있음

- 하지만 외국 보고서의 한계는 많은 국가들을 동시에 평가하다 보니 우리 경영자입장에서 실제로 피부에 와닿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
 - ▶ 특히 외국보고서들은 각 나라의 “기본 인프라” (법/제도, 교육수준, 의료시설 등) 평가에 지나치게 치중하여, 해당국의 경영자가 처한 국제환경의 문제와 사회문화적 환경요인을 간과한 측면이 있음

III 한국기업 공통의 “위협요인” 분석

1. 분석의 틀

- 각 국 기업환경을 분석한 외국계 보고서들은 국가의 기본 인프라 분석 (특히 정책/제도)에 치중해 실제 경영자들이 공통적으로 체감하는 기업환경과는 괴리가 있다고 판단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기업환경 분석을 1) 정책/제도환경, 2) 국제적환경, 3) 거시경제적환경, 4) 사회문화적환경, 5) 시장/산업환경의 5가지 영역으로 확장하여 분석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표 3> 기업환경의 분류

	산업 공통요인	산업 특수요인
위협 요인	1. 정책/제도환경 (예: 최저임금/통상임금↑) 2. 국제적환경 (예: 북핵위협/중국위협) 3. 거시경제환경 (예: 금리/유가/환율/인플레이) 4. 교육문화적환경 (예: 반기업정서) 5. 시장/산업환경 (예: 경쟁↑, 인구절벽, 노조)	1. 정책/제도환경 (예: 대형유통사 규제) 2. 국제적환경 (예: 중국의 한류방송규제) 3. 거시경제 (예: 원목가격 상승) 4. 교육문화적환경 (예: 3D기피현상) 5. 시장/산업환경 (예: 편의점시장 경쟁증가)
기회 요인	1. 정책/제도환경 (예: 창업지원) 2. 국제적환경 (예: 인도/동남아시아시장의 성장) 3. 거시경제환경 (예: 금리/유가) 4. 교육문화적환경 (예: 양질의 우수인력) 5. 시장/산업환경 (예: 모바일환경의 도래)	1. 정책/제도환경 (예: 핀테크회사 정부지원) 2. 국제적환경 (예: 반도체 해외수요급증) 3. 거시경제환경 (예: 유가상승과 정유사수익) 4. 교육문화적환경 (예: 금융업에 대한 인기) 5. 시장/산업환경 (예: 드론시장 급성장)

- 또한 특정 섹터의 기업환경이 아닌, 1) 기업인들이 공통적으로 인지하는 환경에 주목하며, 2) 기회요인 보다는, “위협요인”에 더 초점을 맞춤
 - ▶ 그 이유는 본 보고서의 목적이 환경위협요인을 파악하여 이에 대처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주기 위함 (기회요인에 대해서는 따로 정책이 필요없다고 봄)
 - ▶ 결론적으로 <표 3>의 음영으로 표시된 영역이 본 보고서에서 주로 분석할 대상

2. 국내 정책/제도환경의 기업 위협요인

- 외국 보고서에 계속 경고되었듯, 기존 한국의 법/제도에는 기업인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요인들이 다수 존재 5)
 - ▶ 예를 들어 배임죄는 독일, 일본, 한국에만 있는 죄목으로 경영자의 경영활동에 암묵적 부담을 줌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는 고의성을 엄격하게 판단하지만 한국에선 법이 애매하고 추상적이어서 잣대가 명확치 않은 것이 문제)
 - ▶ 환경, 안전, 노동 등의 관련법은 법인 이외에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책임을 병행해 묻기도 함
- 특히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상속세로 인해 기업가정신이 위축되고 다른 탈법 행위의 원인이 됨
 - ▶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까지 더하면 최고 65%에 달하여 세계 최고
 - ▶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다른 탈법적 행동을 촉발
 - ▶ 홍콩과 싱가포르를 비롯해 캐나다와 호주 스웨덴 등 상속세가 아예 없는 나라도 수두룩한 실정

<표 4> 국가별 상속세 최고세율 비교6)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한국	OECD평균
35%	40%	50%	50%	65%	26.3%

- ▶ 2016년 중소기업청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실시한 ‘2016년 중견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의 72.2%가 상속·증여세 등 세금이 기업 승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답한 바 있음7)
- ▶ 하지만 최근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하여 상속세를 다시 높일 예정
- 더욱이 2017년 문재인 정부이후 거의 모든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반기업적 정책들이 쏟아지면서 경영 위협요인들이 증가 (<표 5>)

5) 조선일보 (2017. 9. 9.), “기업하기 힘든 나라”

6) 매일경제신문 (2017. 5. 17.), “‘65%` 한국 상속세 세계 최고 vs 홍콩·싱가포르 `0%`”

7) 중소기업청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2017) “2016 중견기업 실태조사”, p. 34.

- ▶ 2018년 최저임금이 2017년보다 16.4% 급증한 7530원으로 결정되었고, 2020년에는 1만원까지 상승할 예정
- ▶ 2017년 8월 31일 법원이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기업의 임금부담이 가중
- ▶ 근로시간단축과 관련,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법'이 2017년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
- ▶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 강화와 함께 최근 공정위원장의 가격통제 입법화 추진 발언 8)
- ▶ 탈원전 추진으로 향후 모든 기업들의 전기료 상승이 불가피 (독일의 경우, 탈원전 후 산업용 전기료가 7년새 41.8% 증가)9)

<표 5> 문재인 정부 이후 모든 기업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정책/제도적 위협

정책/제도의 위협요인	기업의 부담
1. 최저임금 상승	산업 전반에 걸친 임금상승
2. 통상임금 판결	산업 전반에 걸친 임금상승
3. 근로시간 단축	산업 전반에 걸친 임금상승
4. 공정거래위원회 역할강화	기업 자율권의 위축
5. 탈원전	산업 전반에 걸친 전기료 상승

- 일반적 기업들이 아닌 대기업만을 타깃으로 만든 규제는 기업의 활동범위를 보다 더 제한하고 부담을 증대

8) 조선일보 (2017. 8. 28.) “김상조가 재점화한 공정위 가격통제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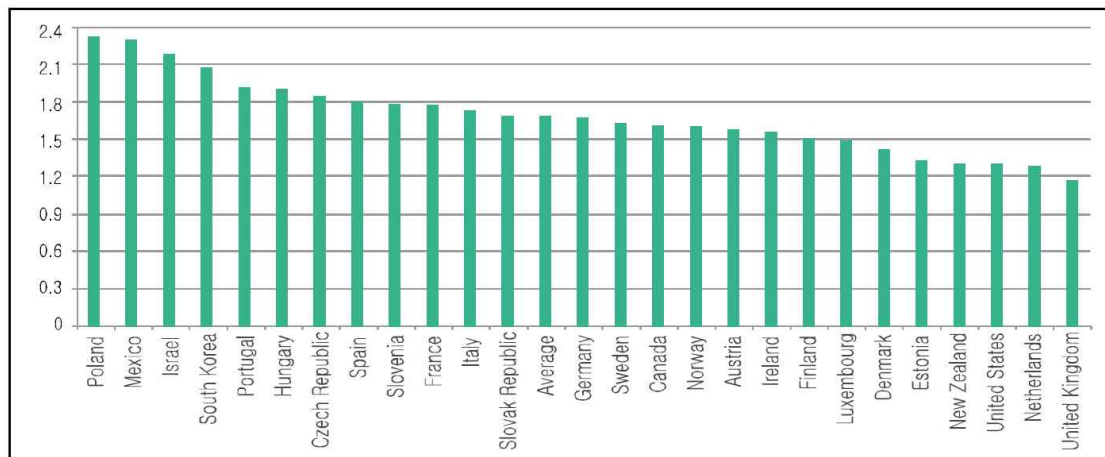
9) 양의석 김아름 김비아 (2017. 8. 14.) “독일 에너지전환 정책목표와 조기탈원전 결정 가능조건”, 세계에너지시장이론사이트, 에너지경제연구원

<표 6> 2017년 세법개정안 중 대기업을 타겟으로 한 내용¹⁰⁾

1. 법인세 인상	내년부터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분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3%포인트 높이기로 했고, 그 적용 대상 기업은 129곳의 대기업
2. 대기업R&D비용 세액 공제 축소	대기업의 일반R&D 증가분 세액공제(30%)는 현행 유지하되, 당기분은 축소 (R&D지출액의 1~3% → 0~2%)
3. 대기업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당해연도 소득의 80% → ('18년) 60% → ('19년) 50%

-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기타 특정산업을 대상으로 한 세세한 법규제들 까지 열거하면 한국의 규제는 거미줄과 같이 촘촘한 상태
 - ▶ 방통위의 통신비 규제
 - ▶ 복합쇼핑몰 출점규제
 - ▶ 대형마트 영업 규제 등
-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가 작은 공무원 인력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나 넓은 정부의 활동영역이 설정되어 있다고 판단했고, 이를 정부의 실제규모가 크다는 의미로 해석함
 - ▶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향후 5년간 공무원 17만 명을 늘린다고 공약한 상황

<그림 3> 시장개입정도의 국제비교 (1998~2013년 평균)¹¹⁾



10) 기획재정부 (2017. 8. 2.) “2017년 세법개정안”

11) 윤상호 (2016. 3) “정부규모와 경제발전: 공무원수를 중심으로”, KERI Insight, 한국경제연구원

3. 국제환경의 위협요인

- 한국기업들의 글로벌화로 인해 기업마다 느끼는 국제적 환경의 위협요인이 다 다를 수 있지만, 현재 가장 공통적인 세 가지 국제적 요인은 1) 북핵위협, 2) 중국위협, 3) 한미FTA재협상 문제
- 현재 한국을 가장 위협하는 국제환경의 리스크는 “북한의 핵실험”
 - ▶ 북한이 핵미사일을 시험발사할 때마다 주가, 환율, 금값 등에 상당한 영향을 줌
 - ▶ 올해 8월 초 미국과 북한의 갈등이 노골화되자, 국내 10대 그룹 상장사 시가총액이 열흘여 만에 48조원이나 허공으로 증발하기도 함¹²⁾
 - ▶ 특히 여행관련 업종(항공, 호텔, 요식업)은 북핵리스크에 따라 매출에 큰 악영향을 받음
- 최근에는 북핵 못지않게 중국이 한국기업에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부상
 - ▶ 사드문제를 트집잡아 한국기업들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실정
 - ▶ 롯데마트, 기아자동차, 한국 화장품, 한류 등 우리의 주요 중국사업에 제동을 걸고 있음
 - ▶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한 한국의 경제적 손실을 8.5조원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중국의 1.1조 손실의 8배 정도¹³⁾
- 최근 한국인의 의식도 점차 중국을 잠재적 위협국으로 인식하기 시작
 - ▶ 최근 미국의 Pew Research는 글로벌 8대 위협을 선정한 후, 전세계인들에게 그 위협정도를 물었는데, 한국인의 경우 글로벌 8대 위협 중 중국을 최대위협으로 꼽은 사람들이 84%나 달함 (북한은 글로벌 8대 위협 리스트에 없었음)¹⁴⁾

4. 거시경제환경의 위협요인

- 한국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있는 거시경제변수는 국내외 금리, 환율, 유가, 인플레이, 실업률 등을 꼽을 수 있음

12) 연합뉴스 (2017. 8. 13.) '북한 리스크' 10대그룹 상장사 시가총액 48조 증발

13) 현대경제연구원 (2017. 5. 12) “현안과 과제: 최근 한중상호간 경제손실 점검과 대응방안”

14) www.pewglobal.org/2017/08/01/globally-people-point-to-isis-and-climate-change-as-leading-security-threats/

- 그러나 이들 변수들의 특징은 모든 기업들에게 위협도 될 수 있고 기회도 될 수 있다는 점
 - ▶ 예를 들어 달러대비 원화가 강세인 경우 수출이 불리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 수출에 유리
 - ▶ 따라서 환율자체가 위협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상황에 따라 위협일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음

- 반면 유가와 고용시장의 경우, 위협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음
 - ▶ 석유의 경우, 셰일가스라는 대체재의 출현으로 대체로 과거에 비해 가격이 하락하여 일반산업에 위협정도가 낮아짐 (단 정유, 조선, 건설 등 일부사업 제외)
 - ▶ 전기자동차 등의 신기술도 이런 추세에 일조

<그림 3> 지난 10년간 유가(WTI)의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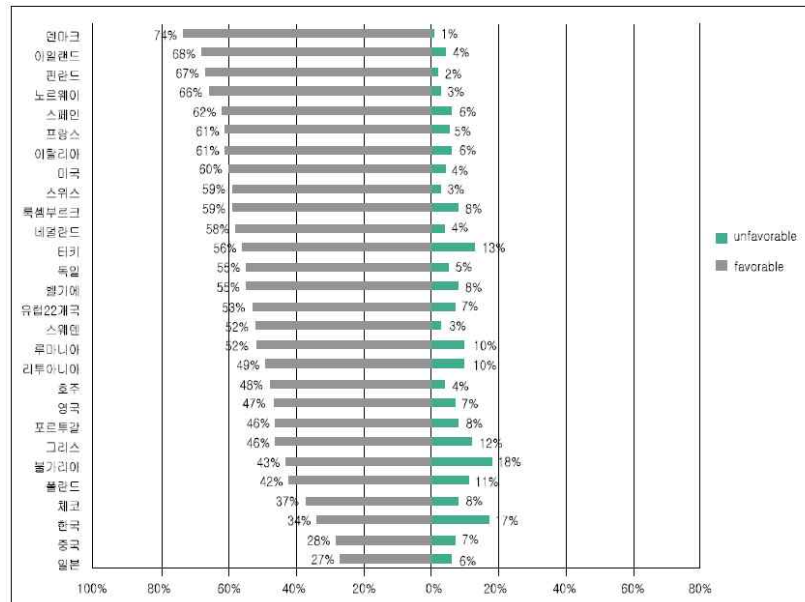


- ▶ 고용시장의 경우, 실업자의 증대와 취준생들의 증대는 기업입장에서 양질의 인력을 쉽게 뽑을 수 있는 기회요인 (그러나 고용난 속에서도 취업난이 가중되는 현상은 3D직종을 기피하는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보아야 함)

5. 사회문화적 환경의 위협요인

- 사회문화적으로 기업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는 한국민의 ‘반기업 정서’

<그림 4> 유럽집행위의 기업호감도 국제비교 결과¹⁵⁾



- 위 <그림 4>의 기업호감도 국제조사에서 한국의 기업에 대한 비호감도 수준은 17%로 꼴찌에서 두 번째
 - ▶ 기업에 대한 비호감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18%인 불가리아이고 한국은 그 다음을 차지
- 더욱이 대상을 “대기업”으로 한정하면 국민들의 반감은 더 나빠짐
 - ▶ 2013년도 국제 컨설팅 회사인 GlobeScan의 주관 하에 26개국에서 대기업 및 정부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대기업 신뢰도는 한국이 36%로 가장 낮았음
- 반기업정서의 원인은 크게 기업자체의 문제점과 한국 내의 이른바 ‘진보’ 계열 단체들의 약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음
 - ▶ 과거 기업들의 탈법과 불법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드라마나 영화에서 과대포장되면서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가 형성됨
 - ▶ 또한 전교조와 같은 단체들이 학과과정에 자유시장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는 교육을 한 결과로도 볼 수 있음 ¹⁶⁾
- 최근엔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에 대한 관심이 일면서 이윤추구 기업을 오히려 나쁜 기업으로 교육하는 지경에 이름

15) 황인학 (2015. 11.) “KERI Insight: 한국의 반기업정서, 특징과 원인진단”,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췌

16) 문화일보 (2007. 5. 8.) “전교조에 휘둘러 ‘經盲’ 더 키우는 교육부”

- ▶ 일부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돈을 안 벌어도 되는 기업, 또는 무조건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착한기업’이라고 잘못 교육하고 있으며, 이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음
- ▶ 사회적 기업은 사회주의적 기업은 아니지만, 사회적 기업을 이윤추구하지 않는 기업으로만 포장하여 젊은이들을 오도하고 있음¹⁷⁾

<그림 5>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6년 2학기부터 배포한 중학교 교과서 '사회적 경제'¹⁸⁾



- 반기업정서의 확산 속에 기업가 정신은 137개국 중 중하위권을 맴돌고 있음
 - ▶ 세계기업가정신 발전기구(GEDI)가 발표한 `2017 글로벌 기업가정신 지수 보고서`에 세계 137개 국 중 27위에 랭크
 - ▶ 칠레, 에스토니아, 대만보다 낮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만 따져도 23위로 중하위권에 위치
 - ▶ 특히 기업가에 대한 사회의 호감도를 뜻하는 ‘문화적 요인’은 지수가 산출된 2012년 이후 계속 나빠져 반기업 정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

<그림 6 > 2017 GEI(글로벌 기업가정신 지수) 국가순위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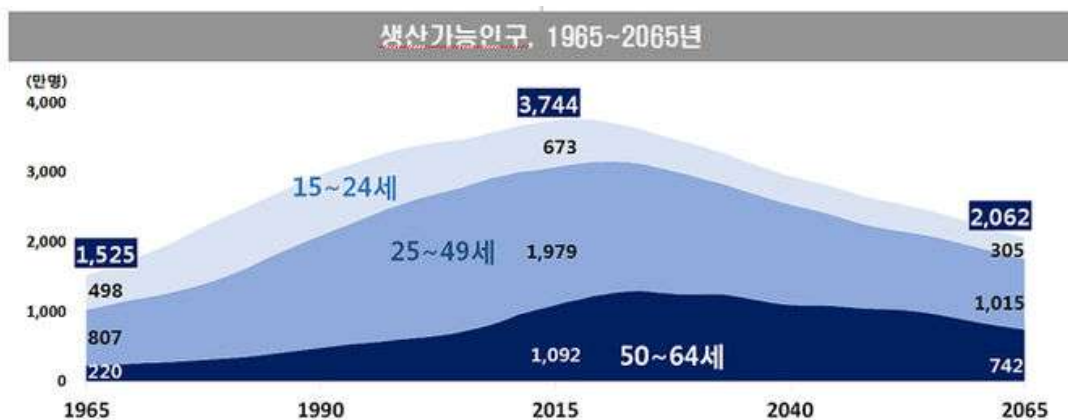


17) 서울경제신문 (2017. 4. 4.) “사회적기업의 오해와 진실”
 18) 매일경제신문 (2016. 10. 16.) “반기업정서 주입식 교육하는 진보교육감”
 19) 한국경제신문 (2017. 2. 22.) “한국의 기업가정신은 망가진 바퀴”

6. 시장/산업환경의 위협

- 시장/산업환경으로 가장 주요한 요인들은 소위 “Five Forces”로 불리는 5개의 기업환경요인
 - ▶ 경쟁자, 소비자, 공급자, 대체재, 신규진입자가 그것
- 이중 한국의 모든 산업에 공통적으로 위협적인 요소는 1) 전반적 경쟁자들의 증가, 2) “인구절벽”으로 인한 소비계층의 축소와 3) 노동의 공급자인 “노조의 위협”을 들 수 있음
- 우리 경제는 과거에 비해 경제성장이 고도로 이루어지면서 거의 모든 분야에 경쟁자들이 많아짐 (공급이 많이 늘어난 결과)
 - ▶ 50~60년대 공급이 부족하던 시기에는 기업의 수 자체가 작았음
 - ▶ 최근에는 재화와 서비스의 수가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경쟁이 치열하여 사업의 조건이 과거보다 오히려 더 열악해 짐
- 인구절벽으로 인해 소비절벽이 오고, 기업의 매출은 급감할 것으로 예측됨
 - ▶ 미국 경제학자 해리 텐트는 2015년 세계지식포럼에서 한국이 2018년을 기점으로 ‘인구절벽’을 맞고 불황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
 - ▶ 또한 영국의 옥스퍼드대학 인구문제연구소도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경고²⁰⁾

<그림 7> 국내 생산가능인구 추이²¹⁾



20) 해리 텐트 (2015) “2018 인구절벽이 온다”, 청림출판

21) SBS 뉴스 (2016. 12. 8.) “인구절벽의 첫발...생산가능인구의 감소”

- 한국의 강성노조는 전통적으로 기업경영에 가장 큰 위협요인 중의 하나
 - ▶ 2016년 국내 전체 사업장의 노사 분규는 총 120건으로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121건) 이후 가장 많았음²²⁾
 - ▶ 특히 작년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는 무려 203만5000일로, 집계를 시작한 199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함
 - ▶ 다만 새 정부이후 노사분규는 다소 진정된 편임 (최저임금인상, 통상 임금 판결 등이 노조에 유리하게 흘러갔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음)

- 또한 힘이 세진 노조는 노동운동의 본질을 벗어나 국방과 외교안보 문제에까지 위협적으로 월권을 하고 있는 상황
 - ▶ 민노총은 올해 다수의 사드반대 집회를 열고 올해 광복절에는 사드반대, 미국반대를 외치며 미 대사관 포위를 시도²³⁾

22) 한국노동연구원 (2016. 12.) “2016년도 노사관계 실태분석 및 평가”

23) 중앙일보 (2017. 8. 15.) 미 대사관 앞에서 "전쟁 반대" "미국 반대"...광복절 대규모 '사드 반대' 집회

I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한국의 기업경영자들은 외국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수많은 반시장적 정책과 규제에 시달리고 있음
 - ▶ 특히 최근 새 정부의 방침이 정부의 개입 증가와 친노조 성향을 보이고 있어 기업의 자유가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
 - ▶ 최근의 한국의 반기업적 정책상황이 반영된다면, 내년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 또는 “국가경쟁력” 보고서에선 한국의 순위가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음

- 최근 정부의 정책변화를 감지하고 일부 기업들은 이미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 경방은 내년부터 시간당 7530원으로 오르는 최저임금을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광주광역시 면사 공장 일부를 베트남으로 옮기기로 결정
 - ▶ 전남방직은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까지 단축되면 국내 6개 공장 중 일부를 폐쇄하는 등 구조조정 방안을 검토 중
 - ▶ 최근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2017년 중소 수출기업 경쟁력 실태조사' 보고서는 총 1015개 중소 수출기업 중 49.1%가 해외생산 확대 및 신규 해외 생산거점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발표²⁴⁾

- 한편 외국보고서에서는 주로 국가의 인프라와 정부규제 요인들 위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그 국가의 경쟁력을 분석했으나, 한국적 기업환경을 분석하기에는 미흡
 - ▶ 본 보고서에서는 거시경제적, 사회문화적, 시장/산업적인 측면까지 고려

- 현재 한국기업들은 정부의 규제뿐만 아니라 국제적 위협(북핵, 중국), 사회문화적 위협(반기업정서), 산업/시장의 위협(경쟁자증가, 인구절벽, 강성노조)에도 대처해야 하는 매우 불리한 환경에 처해있음

- 이상에서 파악된 위험요인들은 한국 기업 공통의 위협들로, 정부가 만약 경제를 살리는 정책에 관심이 있다면 위 위협들을 무마해줄 수 있는 정책

24) 한국무역협회 (2017. 8.) “2017 중소 수출기업 경쟁력 실태조사”

을 펼쳐야 함

- ▶ 반복되는 제언이지만, 정부가 규제를 혁파하고 기업활동에 일일이 간섭하는 것을 최소화해야함
- ▶ 특히 가격(임금 혹은 직접적 제품/서비스 가격 포함)이 시장 자율이 아닌 정부의 인위적 의지에 의해 정해질 때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 ▶ 비즈니스 친화적 정책이 곧 노동자의 복지와의 연결된다는 사고가 필요